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2019. 8. 6.

교 육 부
[고등교육정책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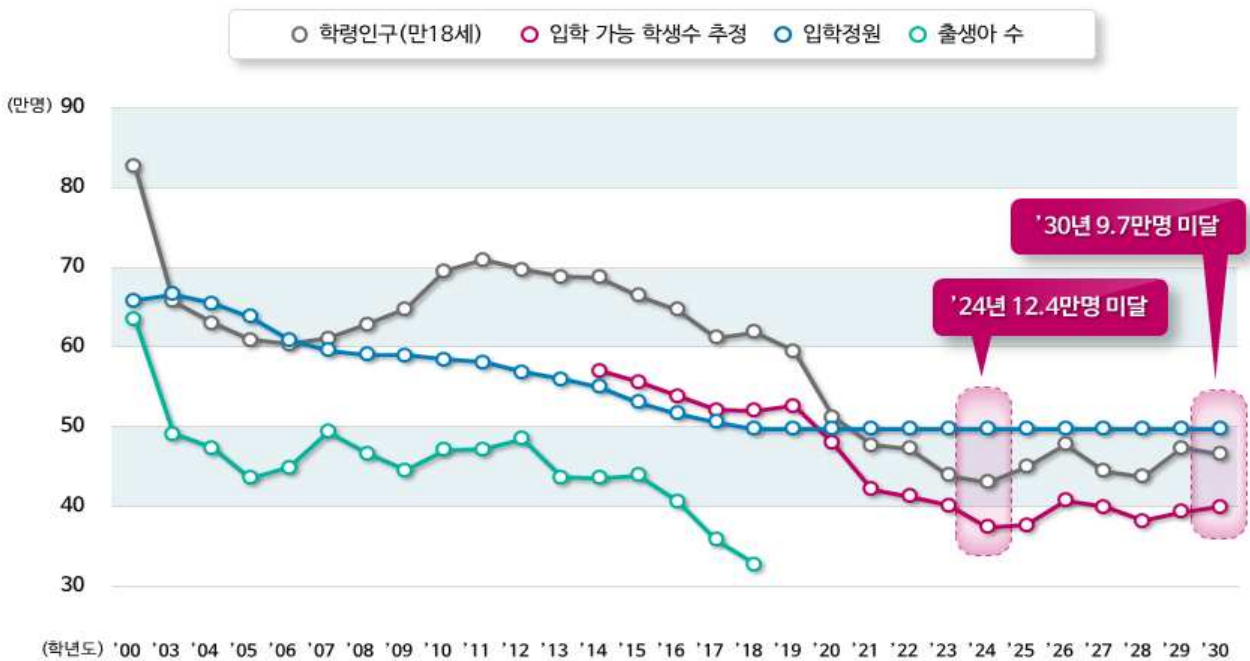
I. 대학교육 환경변화	1
II. 우리 대학의 현 주소	3
III. 중장기 대학정책 방향	7
VI. 대학혁신의 비전과 과제	8
1. 미래사회 대응 교육·연구 혁신	9
2.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19
3.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22
4.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	28
[붙임1] 주요과제 추진 로드맵	37
[붙임2] 입법과제 현황	38
[붙임3]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흐름	40
[붙임4] 우리대학의 미래모습	41

I. 대학교육 환경변화

□ 학생인구 급감 등 인구구조의 변화

- '24년 현행 입학정원 수준 유지 시('18년 기준, 49.7만명) 약 12.4만명의 입학생 부족 예상('24년 입학 가능 학생수 추정, 37.3만명)

《 학령인구 및 입학 가능 학생수 감소 추이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가능 학생수 급감,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으로 지방대, 전문대부터 운영 어려움 직면
 - 대학은 정원 감축, 기능 개편 등 적정규모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교육의 혁신 요구

- 4차 산업혁명으로 IC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융합 기술 진보에 따라 새로운 산업 증가, 직무능력 변화
 - ※ '30년까지 전체 일자리수의 15~30%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 ('18, 맥킨지)
 - 새로운 산업분야(지능형(AI) 반도체,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고급 일자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인지적 역량과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필요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에 집중 투자

※ (독일) Excellence Initiative 프로젝트, 대학의 연구력 증진 및 연구중심 대학 구축 ('06~'17, 6조원 이상), (중국) 쌍일류 프로젝트, 세계적인 일류 대학교와 일류 학과 건설 프로젝트 ('16년~'22년, 18조 원)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사구조의 혁신 및 고등교육 체제 개편 등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혁신 추진

※ (프랑스, Ecole 42) 학비·교수·교재 없이,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등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조

-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 및 지방위기 상황에서 폐교 및 위기대학 발생에 따른 인재 유출 가속화 및 지역경제 위축 심화 우려

* 지방대 폐교·통폐합에 지역 경제 휘청... 대안 없어 ('18.4.24, MBC), 퇴출대학 속출하는데... 부지·시설활용은 무대책 ('19.1.22, 문화일보)

- 대학이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기대와 요구 증가

※ 지역-대학 등 연계협력 국내 대학 주요사례

 <p>HuStar 동주혁신대학(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 구축 필요</p>	<p>(대구-경북, 휴스타(HuStar) 프로젝트) 미래 신산업(AI·SW, 로봇, 미래차 등)을 이끌어 갈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체가 연계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실습 운영</p>
 <p>제4회 Univer+City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포럼 2018.12.20(목) 14:00~17:00 포항시 차남1동 3층 대회의실</p>	<p>(포항공대, 유니버+시티(Univer + City) 프로젝트) 대학의 시설(4세대 방사광가속기)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사업을 집중 육성해 '25년까지 포항시에 '신약 개발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16~)</p>

⇒ 인구구조 변화 및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대학의 체질 및 고등 교육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

II. 우리 대학의 현 주소

□ 경직적 교육체제로 혁신모델 창출에 한계

- (경직적 교육모델) 전통적 학과 중심의 학사제도 운영, 지식 전달 위주의 대학별·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지속
- (인력수요 대응 미흡) 산업구조 변화로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필요*하나, 대학이 신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
 - * 5대 신산업 분야(차세대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증강현실·가상현실, 첨단 신소재) 산업기술인력은 실제 필요인력보다 3.7% 부족 ('19.7, 산업부)
 - ※ '18~22년까지 5년 동안 국내 AI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9,986명 부족, 석박사급 인력은 7,260여명 부족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8.4월)
- (연구지원 미흡) 대학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구자 위주 지원으로 기관 차원의 체계적·전략적 연구지원은 미흡
 - ※ 한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은 0.84% < 세계 평균(1%) (한국연구재단, '19)

□ 지자체-대학 간 실질적 연계와 협력 미흡

- (중앙정부 중심 대학 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개별 부처에서 지원*하여 부처별·사업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지역대학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지역사회와의 소통 제한적
 - *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17년 대학재정알리미 기준, 총액 13.52조원) : 교육부 9.06조원, 타부처 3.98조원, 지자체 0.47조원
- (지역사회-지역대학 연계 필요성 증가) 지역위기·지역소멸 상황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대학 역할*의 중요성 부각
 - * 지역의 인력개발,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조성, 기술정보 인큐베이팅, 지역생산물 구매, 지역구성원 고용 등

□ 대학의 혁신지원을 위한 기반 미흡

- (대학의 자율성 제약) 학사 운영·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규제 개선 노력에도 대학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요구
※ 경쟁력 갉아먹는 대학규제. 캠퍼스 없는 스쿨...한국은 불가능 ('19.6.9, 연합뉴스)
- (대학에 대한 낮은 신뢰) 일부 대학의 회계부정, 학사비리, 교원의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 (대학재정 여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여건 조성에 한계
※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대학 세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는 시설비·연구비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학의 혁신 역량 저해 우려

□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응체제 미흡

- (대학평가 기능) 인구구조 변화 및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대학교육 질 제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학평가 기능 재정립 요구
- (대학 특성화 한계) 설립유형별 특화된 역할과 기능 확립에 한계

국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역할) 고등교육 기회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한계) 정책·재정 부족으로 공적 역할 수행에 한계	(역할) 다양성, 건학이념 실현 (한계) 일부 사학 비위 등으로 자율성 보장 및 공적 지원에 의한 사학육성 어려움	(역할) 직업기술인력 양성 (한계) 평생직업교육 필요성 부각되나, 전문대에 대한 낮은 인식, 일반대와 구분 모호

- (신수요 창출 한계) 평생직업교육 수요는 증가하나 성인친화적 대학 학사체계 구축에 한계,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 질 관리 필요
※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속 증가 ('15년 9만명 → '18년 14만명)
- (폐교대학 관리)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발생 증가가 예견되나 ('00~'18년 총 16개교 폐교), 대학 폐교과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재
 - 학생 감소, 재정여건 악화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대학들이 증가하나, 자발적 퇴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 대학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p>1 대학교육 <수도권 사립대·전문대 교수, 인사담당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분야별 경계가 너무 뚜렷하죠. 학과별로 모든 지표를 따지거든요. - 학과의 입학정원. 그런 것들도 좀 경직된 게 아닌가.. - 사람을 뽑을 때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함 	<p>2 대학연구 <수도권 사립대 교수, 대학원생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원을 안 가잖아요? 왜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을 안 갈까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 대학원생들이 다 강사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진로탐색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줘야 할 것 같아요.
<p>3 지역혁신 <전문대 교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대한 권한이나 재정지원은 중앙 정부가 하잖아요. - 지방정부는 대학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지 않아요. 지자체 스스로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가야 	<p>4 규제혁신 <지방 사립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중에 결과만 교육부 감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규제하지 말고 결과를 보자. - 교지 확보율 그런 것까지 따지면 미네르바 스쿨도 떨어질 겁니다. - 획일화된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죠.
<p>5 사학혁신 <지방대 직원, 대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건전한 대학들도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 대부분 학생들이 본인 등록금 어디 쓰이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p>6 대학재정 <수도권 국립대 교수, 대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T는 1조원 가지고 AI 대학원 만드는데, 그럼 탕크하고 소총 싸움인 거예요. - 지금도 학비가 비싸서 학교 그만두고 다시 등록금을 갚고, 더 올리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p>7 대학평가 <지방 국립대·전문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대학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의 수나 명운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결정할 문제이고.. -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필수 지표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좀 자율적으로 대학에 맡겨주면 어떨까. 	<p>8 고등교육체제 <수도권 국립대·전문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남은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질을 높이고 살려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그 관점을 선회할 때. - 문을 닫고 싶어도 투자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버티려고 하니까 잘 빠져나가게끔 뒤에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

< 최근 2년간 고등교육정책 노력 >

○ (고등교육 투자) 2년간('17~'19) 고등교육 예산 약 8천억원 확충

※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 ('17) 9.2조 → ('18) 9.5조 → ('19) 10조

※ '19년 고등교육 주요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8,595억원), 국립대육성사업(1,504억원), LINC 등 산학협력고도화지원(3,863억원), BK21+(2,967억원)

○ (국립대학 육성 등)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국립대학 간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 ('17) 18개교 210억 원 → ('18) 39개교 800억 원 → ('19) 39개교 1,504억 원

** 거점국립대 9개 대학 간 개방·공유 협력체계 (K-NU9) 구축 : K-MOOC 공동 개발 및 운영,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보 연계(지원)시스템 구축 등

- 지방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 연계·협력 클러스터 구축*, 대학 인프라 기반으로 기업·연구소가 입주하여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 ('19) 12개 컨소시엄 선정(58개 대학, 40개 지자체(광역 14, 기초 26), 155개 공공기관)

○ (대학 진단체제 구축) 정부주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식을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시행하여 대학의 자율 발전 지원

- 진단 결과에 따라 ① 자율개선대학, ② 역량강화대학, ③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I·II로 구분,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미 실시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기존 정부 주도의 분절적·경쟁적 사업 방식을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사업으로 개편하고, 일반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

*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

※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 특수목적)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 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재구조화

Ⅲ. 중장기 대학정책 방향

□ 대학 정책의 흐름



□ 중장기 대학정책 방향



Ⅳ. 대학혁신의 비전과 과제

비전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대학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추진과제

Ⅰ.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 ① [교육혁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 ② [연구혁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Ⅱ.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 ③ [지역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 ①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계 구축
 - ②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

Ⅲ.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④ [규제혁신]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 ⑤ [투명성·책무성 강화]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 ① 연구윤리 확립, ② 사학 혁신,
 - ③ 대학운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참여 관라강화

Ⅳ. 인구 변화 대응 대학 체제 혁신

- ⑥ [평가혁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위한 평가체제 개선
- ⑦ [체제혁신] 특성화 지향 대학 체제 혁신
 - ① 설립유형별 대학지원, ② 신수요 발굴,
 - ③ 위기대학 관리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확충

+

범부처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미래 인재

지역균형발전

환경변화

정책수요

1. 미래사회 대비 교육 · 연구 혁신

< 기본 방향 >

- ❖ (과제1)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교육을 강화하고 신산업 인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교육혁신」
 - 대학이 융합교육 활성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등으로 신기술 · 신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 강화
- ❖ (과제2) 혁신적 · 창의적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안정적으로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연구혁신」 추진

< 미래사회 대비 교육 · 연구 혁신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 융합교육 활성화

학사구조 개편

학부교육 혁신모델 창출

학사제도 개선 컨설팅 지원



■ 미래 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

범부처 협업체계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양성

소재·부품·장비등

주력사업 핵심인재 양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혁신

■ 혁신적 ·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4단계 BK21 사업 추진

대학원 교육 · 연구 혁신모델 확산

대학원 보유 신기술 창업 활성화



■ 학문후속세대 보호 · 육성

학문후속세대 연구기회 확대

대학 강사제도 안착

대학연구소 지원 확대 등



✓ (과제 목표) 미래 융합인재 양성

- ☞ (장애 요인) 유연한 학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과별 · 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대학의 경직적 학사운영 지속
 - 신산업 분야 인력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의 혁신 유인’ 부족
- ☞ (추진 전략)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별 맞춤형 학사운영 컨설팅으로 유연한 학사운영 안착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부교육 혁신모델 발굴·확산
 - 4차 산업혁명 유망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부교육 혁신

-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는 「학사구조 개편」 지원
 - 대학 내 학과별 · 전공별 경계를 완화하고 다양한 학문 간 ‘융합 학과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0)

【 개선 사항 】

- 계열간 연계 · 융합학과에 대한 학과 · 정원 조정 요건 완화
 - 둘 이상 계열 간 융합학과의 경우, 총 정원 일정비율 범위 내 교사 · 교원 확보 요건 충족 예외 인정 (「대학설립 · 운영 규정」 개정)
 -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근거 마련
 - 둘 이상 학과 ·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학부)의 설치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융합형 학사 조직 설치 가능

○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부교육의 혁신모델 창출

- (유연한 학사제도 활용 지원) 대학이 유연한 학사제도를 활용·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공 및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 지원 추진

- 학사제도 개선 사항 도입 현황 및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19.하)하여 매뉴얼 및 컨설팅 기초 자료로 활용
- 대학 학사제도 개선사항 학칙 반영 등 도입 현황 분석('19.하) → 매뉴얼 및 학사운영 컨설팅 등 추진 ('20~)

※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학사운영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추진

< 학사제도 개선 주요내용 >

다학기제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 운영 가능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인정)
유연학기제	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 가능) ※ (예시) 1학년은 학업과 진로를 숙고하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4학년은 조기취업을 감안한 취업·실습 학기제 등
집중이수제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면 집중강의와 집중이수 허용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은 학칙으로 마련
융합전공제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편제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 학과 통폐합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 (예시2) A대학 경제학과 학생이 'A대학 경제학과와 B대학 IT학과'가 연합하여 개설한 '사이버상거래학 전공' 이수 가능
전공선택제	학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공 이수 ※ (예시1) ○○대, 국문·영문·컴퓨터학과에서 '언어·뇌·컴퓨터(LB&C)' 전공 개설, 원 소속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LB&C전공만 이수해도 졸업 가능
학습경험 인정 확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이전에 쌓은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대학 자율혁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으로 기초교양교육 강화, 융복합 활성화, 학사구조 개편 등 추진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대학 자율협의체(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자율 상호 컨설팅으로 학부교육 혁신

< 학부교육 혁신의 주요 방향(예시) >

- (교양교육)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문·문화·예술·기초과학 분야 기초 교양교육 강화
 - ※ 인공지능 교육확대를 위해 AI 관련 우수 온라인 강좌(K-MOOC) 개발·활용 추진
- (전공교육)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융복합·복수(부) 전공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우수사례 발굴·확산
 - ※ (예시) 심리·뇌인지·수학·인공지능 등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뇌인지 과학 융합 전공 (IT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연계전공 제도 운영사례)
- (교수·학습방법) 온라인 활용 및 사회·산업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개별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 수업방법 확산

□ 미래 신(新)산업 인재양성

-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운영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운영체계 》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미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의제 발굴·추진
 - * 주요 기능 : 사람투자 및 인재양성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전략 마련, 관련 부처 간 협업·조정,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의제 발굴, 심의·의결
-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인재 양성방안 마련 검토
 - * 미래산업 선도인재, 주력산업 핵심인재,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국가 인력수요와 연계, 현장성 있는 산업인재 양성 지원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양성 강화 추진

- 대학별 강점 등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신산업에 대응하는 융합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4년제, LINC+ 사업 참여대학 중 지정·운영) :
'19년 산학협력 고도화형 20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채용연계형) 8개교

- 대학 참여 신산업분야 ('18년) : 스마트 헬스케어(강원대, 부경대), 자율주행 자동차(국민대, 호남대), 인공지능 협동 로봇(한양대), 스마트팩토리(한밭대, 한국산업기술대), 스마트 시티(단국대), AR/VR(한국기술교육대), IoT(전주대) 등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핵심인재 양성 추진(미래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 BK21 후속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연구인력 양성 지원 규모 확대
- 3·4학년 대상 해당 연계·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진단 및 재정 지원사업(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등) 평가지표에 반영

※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18.8, 관계부처 합동)

구 분	주요 산업분야
플랫폼경제 3대 분야	①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8대 핵심선도사업	①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② 바이오 헬스 ③ 스마트팜 ④ 드론 ⑤ 스마트공장 ⑥ 핀테크 ⑦ 에너지 신산업 ⑧ 스마트 시티
3대 중점육성산업	① 비메모리 반도체 ② 미래형 자동차 ③ 바이오 산업

○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수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계약학과*(채용조건형·재교육형) 활성화 및 내실화' 지속 추진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탄력성 부여 및 계약학과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정 ('18.7)

* 90% 이상이 재교육형으로 운영,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활용 증가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삼성전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21년, SK하이닉스) 등)

- '산업맞춤형 단기직무능력인증 과정'에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이수결과의 학점 인정 추진*

* 매치업 이수 결과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위한 「학점인정법 시행령」 등 개정 ('19.12)

※ 매치업(Match業) :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온라인 중심 단기 직무능력인증과정 (6개월 내외)

- 4차 산업혁명 분야 대표기업이 필요 직무제시 및 이수결과를 직접 평가·인증하며 교육기관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 '19년 기준 3개 분야 운영(분야/분야별 대표기업) : ①빅데이터 ((주)엑셈), ②스마트물류 분야(하림), ③인공지능 (KT)

○ 「대학 캠퍼스 재구조화」를 통한 산학협력 공간 마련

- 대학 유휴시설·부지를 활용한 산학 간 융합환경 조성으로 교육-R&D-취업 등이 연계되는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활성화

▪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교육부)

- 대학 유휴시설에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등 산학연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촉진

▪ 캠퍼스 혁신파크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기업입주시설 건립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산학연협력 고도화 및 지역 혁신성장 거점조성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19) : 100억원 12개 클러스터 지원

✓ (과제 목표) 혁신적 연구문화 조성 및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육성

- ㄹ (장애 요인) 양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로 도전적 · 장기적 연구 유도에 한계, 사업단 단위 연구로 대학원 차원의 비전과 전략 미흡
 - 대학원 교육·연구가 산업수요 및 국민 실생활 개선에 적극 대응 미흡
 - 안정적인 연구·일자리 부족으로 안정적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어려움
- ㄹ (추진 전략) 「4단계 BK21 사업」에 질적 평가를 도입하고 기관혁신의 주체로서 대학 본부의 역할 강화
 - 기업 연계 · 현장 기반의 대학원 교육·연구 모델을 확산하고, 대학 캠퍼스 재구조화를 통한 상시적 산학연협력 추진
 -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신진연구자 연구 및 강의기회 제공 확대

□ 혁신적 ·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단계 BK21 사업」 추진
 - (인재육성방향) 핵심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성장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으로 지원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방향	핵심학문분야 후속세대 양성	혁신 성장을 선도할 연구인력 배출 및 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신청 단위	대학원의 단일 학과(부)	융복합 학문 성격을 지닌 대학원 및 대학원 단일학과, 협동과정, 융합전공 등

- (대학원 혁신지원)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본부가 대학원 전체 교육 및 연구 경쟁력 향상을 지원
- (질적평가 도입) 연구의 양적 성과를 질적 성과로 전환하고,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 대표 실적 질적 평가 도입

※ BK21 후속사업 발전방향

BK21 플러스사업(3단계)		BK21 후속사업(4단계)
· 개별 사업단 중심 지원	⇒	· 대학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 및 체질 개선
· 정량지표 위주 평가		·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질적평가 도입
· 국민 실생활 개선 미흡		· 우리사회 문제를 연구하여 국민의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 지원

○ 「대학원 교육·연구 혁신모델」 마련 및 대학원 질 관리 강화

- (혁신모델 확산) 현장사례 기반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운영, 기업 연계 경력 진로개발 체계 구축 등 교육·연구 혁신모델 발굴·확산 ('21~)

※ 미래형 융복합 기술 교육을 위한 석·박사 연구방법, 전공·심화교육 강화 등

- (질 관리 강화) 대학원 대상 대학의 자율평가를 통해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확보, 정보공시 항목* 확대

* 교육·연구의 질 관련 항목(예시) : 계열별 대학원생 연구 성과, 교수당 (논문) 지도학생 수 등

○ 대학원 보유 「신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 대학원(실험실)에서 논문·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여 연구성과의 고부가가치 창출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과기부 협업) : '19년 5개교(29개 실험실)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자금 지원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 지원
(교육부) 기술창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비, 전문인력(instructor) 인건비 등	(과기부)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개발(R&BD) 지원

- (전북대 사례) 창업경영학과(특수대학원) 신설('19~) 및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시장탐색교육(i-Corps)을 벤치마킹한 기술창업 아카데미 운영
- (송실대 사례) 교원업적평가 시 창업실적을 SCI 논문 수준으로 반영하고, 기술창업 특화 교육과정(11개 강좌, 4개 특강, 상시 컨퍼런스 등) 운영

□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학술생태계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학술의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 학술생태계 조성’으로 포용적 가치 확산 ('19.4.기발표)

○ 학문후속세대 연구 기회 확대

- 연구역량이 높은 박사 후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을 확대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유도하고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기여('20년 개편·확대)

-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확대·개편 ('20)
 - 기존 3개 비전임 박사급 연구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
- 이공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확대('20)
 - 박사후 국내·외연수 및 창의·도전 연구기반 사업 지원과제 확대

○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지원 확대

- (대학연구소 지원 확대) 대학 인문사회연구소 및 기초과학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 연구 지원체제 강화

※ (인문사회분야) 대학 인문사회연구소(1,963개, '19)의 15%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소를 최장 20년 (6+7+7) 간 안정적으로 지원

※ (기초과학분야) 대학중점연구소를 집중 육성하여('18년 70개→ '20년 107개) 신진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 (연구소 특화 육성) 문제해결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등 국가·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소 육성

※ 순수학문연구 위주 3개 사업(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신흥지역연구)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순수학문 연구형)

- (보호·소외분야 지원 강화) 학문분야별 연구지원 동향 및 수급체계 분석을 통해 보호·소외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체계 수립

※ 소외보호·창의도전 유형 별도 지원 (인문사회분야 신규 선정과제의 5~10% 별도 선정),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확대 등

※ 학술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 등 학술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학술 진흥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학술정책 등의 연구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할 학술전담기구 설치 검토

《 학술전담기구 기능 (예시) 》

- 국가의 학술진흥 및 기초연구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조사·분석·평가·기획 지원
- 학술연구인력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관련 조사·분석·평가·기획 지원 및 학술진흥 관련 사업 수행
- 연구윤리 제도 연구, 연구윤리 확립 등 연구관리 선진화 업무 추진

○ 「대학강사제도 안착」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육성 지원

- (강사법 개정)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고용안정(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처우개선(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추진

※ 강사임용·재임용절차, 강의시간,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등 규정 (시행령 개정)

- (강사 고용안정 관리)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강사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고 해고 강사에 대한 연구 지원 강화*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19년 추경 편성(280억원)을 통해 해고된 전업강사 우선 지원

- (학문후속세대 육성 촉진) BK21 후속사업 평가에서 강사, 박사후 연구원 등의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지표를 반영하고, 강사 임용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임용할당제’ 등 후속세대 지원 강화

- (행·재정적 지원 강화) 강사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재정부담 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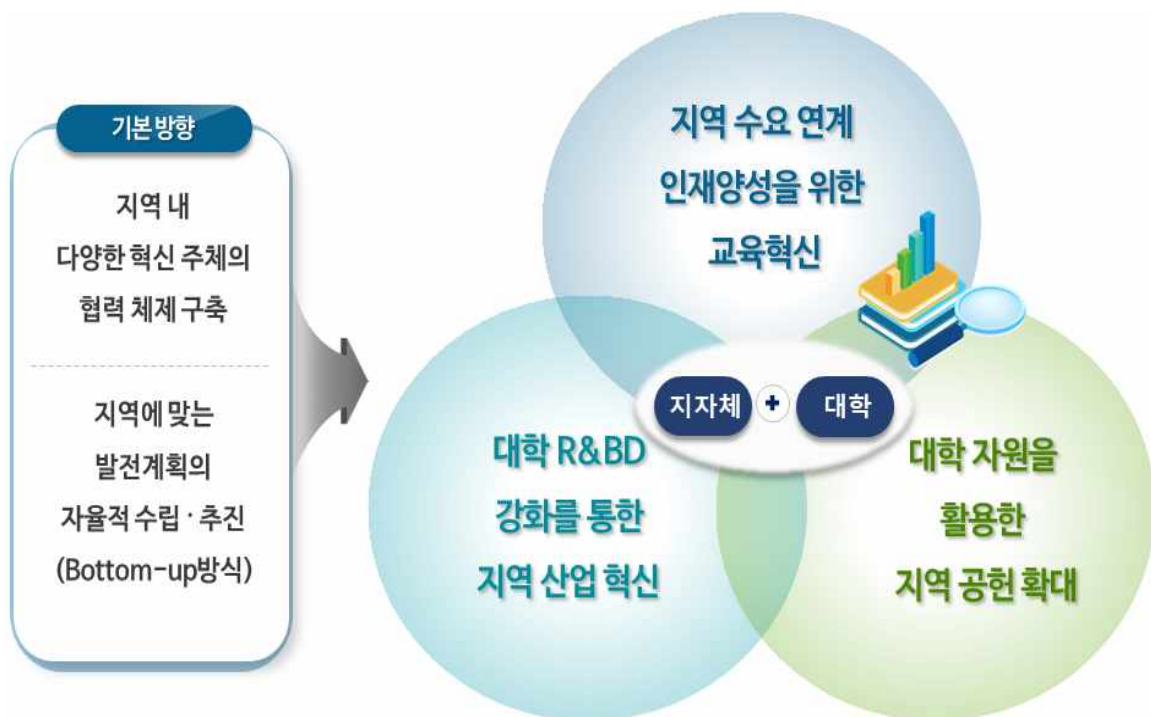
-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마련 및 퇴직금 예산 확보 추진
- 국립대육성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비의 강사 채용 관련 집행 허용
- 「국립대 강사 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국립대학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고내용, 인터넷접수, 지원율 및 중복 지원 체크, 심사결과 관리 등 (’19.6~)

2.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 기본 방향 >

- ❖ (과제3) 지자체-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역혁신」 추진
 -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주도하는 자율 발전계획 수립·추진 지원
 -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 지역대학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여 지역대학을 R&BD 혁신거점 및 지역 싱크탱크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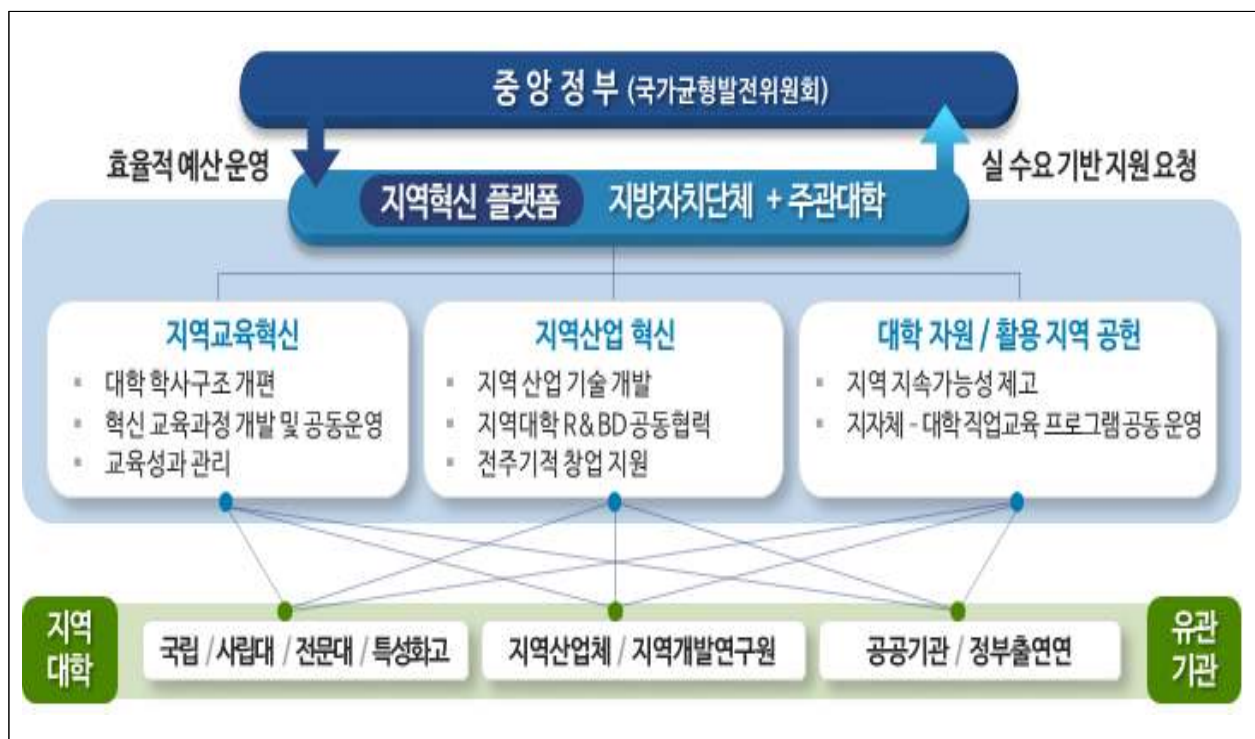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



✓ (과제 목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 ☞ (장애 요인) 지역대학에 대한 (부처별 · 분야별) 분절적 사업 운영으로 인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중심 혁신에 한계
- ☞ (추진 전략) 지자체-지역대학 기반의 지역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
 - 지역 내 대학 간 특성화, 지역산업 연계, 지역공헌 등 대학의 역할 강화

□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 지자체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통해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추진 (Bottom-up 방식)
 - ※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0~, 시범운영) : 지자체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심사 · 지원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21년부터는 각 부처 지역 사업과도 연계

□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지역수요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 지역대학 간 특성화 및 기능조정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첨단학과 및 융합학과 설치·운영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운영

※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위기대학 관리 및 지원

< 지역 내 대학 간 역할 분담 (예시) >



○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 지역 전략산업 분야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계·연구기관 간 연계에 기반한 지역대학의 R&BD 역량 강화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및 참여대학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분야 인재양성 추진

○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헌 확대

- 대학이 지자체·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지역현황 분석·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 내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대학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확대

· 사업모델 구체화 ('19.하) → '20년 사업예산 확보 추진 ('19.하)
→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시범운영 추진 ('20)

3. 자율 ·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기본 방향 >



- ❖ (기본방향)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제고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 (과제4)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도한 대학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규제혁신」 추진
- ❖ (과제5) 대학 회계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등 「사학혁신」을 통한 고등교육의 신뢰회복
- 국립대학에 대하여도 공적 역할 수행에 관한 책무성 관리 강화
- ❖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 지속 확충

✓ (과제 목표) 대학운영의 자율성 제고

- ㄹ (장애 요인) 고등교육 정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 법령 및 제도가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
 - 대학현장에서 과도한 정부규제가 고등교육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인식 지속
- ㄹ (추진 전략) 대학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하여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TF를 운영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부터 조속한 검토·개선 추진
 -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 수립 · 추진

□ 「상시 규제 발굴·개선 체제」 운영

- 정부-대학이 함께하는 “고등교육 규제개선 TF”를 구성·운영*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개선 추진
 - *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에서 규제 개선 과제 발굴('19.2~)
-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19년 「교육부 - (전문) 대교협 공동 TF」를 통해 협의된 규제개선 과제부터 우선 추진
-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학사운영관련 규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검토

<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규제 개선과제 추진(안), '19년 ~ >

구분	현 행	개 선 추 진(안)
정원 ·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학과 설치 불가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대학 정원외 편입학 불가 ■ 이동수업관련 규정이 있으나, 엄격한 운영 기준 등으로 활용 저조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대학 정원외 편입학 허용 추진 ■ 이동수업 운영 확대의 필요성 및 교육의 질 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개정 추진

구분	현행	개선추진(안)
재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재산의 대체 취득 계획 부재 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불가 ■ 법인과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폐기 ■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행위(기채)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법인회계(회계연도 40일전)와 학교회계(회계연도 20일전)의 예산 확정 기한 상이 ■ 교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교지와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동일교지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법인은 대체 취득없이 재산 처분 허가 ■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행위(기채)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서 관할청 보고 사항으로 변경 ■ 법인과 학교의 예산 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20일전으로 일원화 ■ 관계부처(국토부 등) 협의, 전문가 면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동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추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교원 임용 시 관할청으로 7일 이내 임면보고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임면보고 대상이 확대되어 7일 이내 임면보고 곤란 ■ 최근 3년간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은 전문대학원 설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임교원 임용보고 서식 간소화를 통한 업무 부담 완화 ■ 전문대학원 설립 조건을 최근 3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에서 최근 1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으로 완화 ※ '20학년도부터 적용

○ 규제 종합분석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 마련

- '고등교육 규제 현황'과 대학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에 대하여 전면적·종합적 현황 분석 추진 (정책연구, '19.7~)

※ 교육부는 과거 교육 규제개혁('95~'96)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방식으로 '95~'95년 간 전체 규제 건수의 약 50%를 폐지·완화

- 필요시,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법령체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검토 ('20~)

* 포지티브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네거티브 (원칙적 허용, 예외 금지)

✓ (과제 목표)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신뢰 회복

- ㉮ (장애 요인) 일부 대학의 회계부정, 학사비리, 연구 부정행위 등 대학 비리 발생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 ㉮ (추진 전략)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교육 및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등으로 대학의 연구풍토 개선
 -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공적 역할에 대한 책무성 관리 강화

□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 대학 기관평가 인증 등에 ‘연구윤리’ 항목을 포함하고,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학 연구지원센터’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
 - ※ 대학기관평가인증 3주기 평가 시(’21~) 도입을 위한 지표개발 정책연구 추진 (’19)
- 범부처 협의를 통해 연구윤리 개념·유형 검토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연구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전 예방 강화
 - * 「학술진흥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등 사후 조치 철저
 - ※ 매년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사립대학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 사립대학의 책무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추진 방안」 마련 및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령 재정비(’19. 8.)
 - 사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발굴

- ‘법인 임직원 대상 연수’(연2회)를 통해 법인운영 관련 제도 안내 및 법인운영 우수·위반사례 공유 등 법인 임직원 역량 강화 추진
 - ※ 법인 임직원 대상 연수 및 세미나 계획 수립(‘19.하) → 연수·세미나 실시(‘20.~)

□ 대학운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참여·관리 강화

-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확대로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교원징계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위원의 1/3을 임용하도록 하여 교원징계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계류중(발의, ‘19.6.17.)
 - (대학평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제도가 새로 도입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 강화
 - *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위원회 설치가 ’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사립 구분없이 모든 대학에 설치 의무화 (’18.5월 시행) → 39개 국립대학 모두 대학평의위원회 설치 완료(’19.5.29. 기준)
 - (진단지표에 반영) 법령상 위원회 구성·운영 시 대학 구성원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련 제도 등을 진단지표에 포함
 - ※ ’21년 진단 지표에 ‘구성원 참여·소통을 통한 주요 의사결정 및 개선 사례’ 반영 예정
-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상인 39개 국립대학에 대하여 국립대의 공적 책무에 관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관리

*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지표 중 주요 공통지표 (’19)

- 교육여건 (학생 1인당 교육비)
- 고등교육 기회균등 (지역인재 및 기회 균형 모집 비율)
- 연구성과 (교원 1인당 연구실적)
- 지역사회 발전기여 (국립대학 간, 대학-지역사회 간 연계·협력 실적)
- (거점) 기초·보호학문 육성, 국제화역량 강화 등

○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10,109 \$PPP)는 '15년 기준 OECD 평균(15,656 \$PPP)의 64.6% 수준으로 32개국 중 26위로 낮은 편
-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나, 민간부담은 크고 정부투자는 저조한 구조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 ('15 OECD 교육지표 2018)

	정부재원 비중	민간재원 비중	합 계
OECD 평균	1.1%	0.4%	1.5%
우리나라	0.9%	0.9%	1.8%

○ 고등교육분야 정부재정지원사업 투자 확대

- (기존사업 확대) 일반 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과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BK21, 산학협력, 학술연구 등) 예산 확충
- (신규사업 발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폐교대학 종합관리 등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지속 발굴

○ 대학 재정 부담 완화를 제도 개선 추진

- (국가장학금 II 유형* 적용방식 개선) 참여조건 중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등에 대한 기준 개선을 통해 대학 간 형평성 제고 검토

* 전년 대비 ① 평균 등록금 인하·동결, ② 1인당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 조건

※ '17년 사립대 교내장학금 등록금 수입의 21.9% 차지('11년 대비 17.2%, 약 3천억 증)

○ 재정책충을 위한 중·장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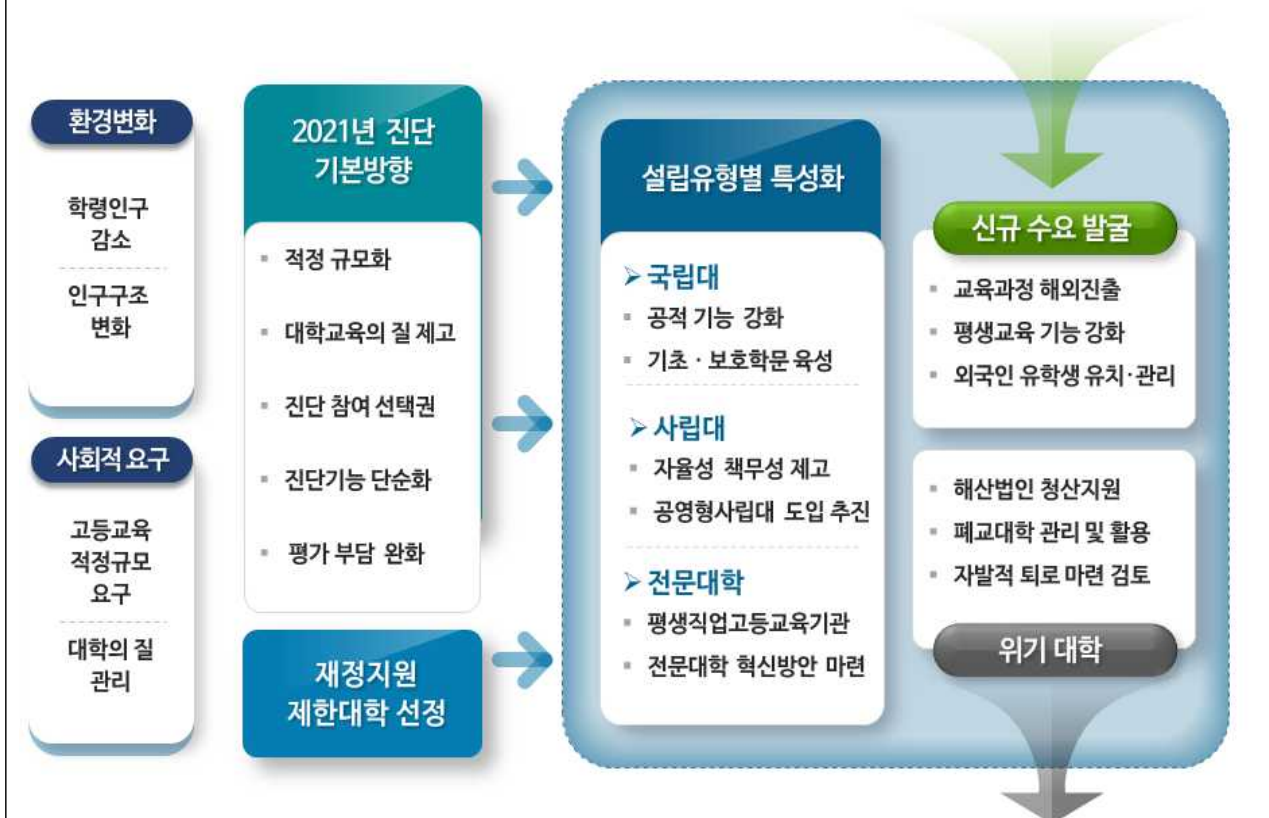
- (법률(안) 제정 검토)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4.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

< 기본 방향 >

- ❖ (과제6)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 규모화를 위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개선 등 「대학평가 혁신」
- ❖ (과제7) 설립유형별 특성화를 통한 「대학체제 혁신」
 - (특성화) 기초·보호학문 중심 국립대 육성, 자율성·책임성 기반 사립대 육성, 평생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정체성 확립
 - (신수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 국내 대학 해외진출 등 새로운 교육수요 발굴
 - (위기대학 관리) 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학생·교직원·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교 종합 관리방안' 마련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



✓ (과제 목표)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평가

- ☞ (장애 요인)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 및 평가 결과와 정원 감축 연계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평가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
- ☞ (추진 전략) 교육의 질 제고, 대학규모 적정화 유도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 ▶ 대학에 진단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학의 자율성 존중
 - ▶ 대학 대상 각종 평가 실태를 분석하여 평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능 재정립

- 대학이 특성화 방향에 따라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교육의 질 향상 유도
 - ※ 향후 추진 일정 : '21년 진단 방안(시안) 마련 ('19.8월) → 의견수렴 및 방안확정 ('19.9월) → 대학 설명회('19.하) → '21년 진단실행 ('21.상)
-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으로 단순화하고,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진단 지표를 간소화하고, 진단·인증 간 유사 지표(요소)를 연계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 '18년과 '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비교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 정원감축 권고 • 모든 대학 대상 실시 • 대학 유형 구분(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자체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 유도 (신입생·재학생 충원을 비중 강화) • 진단 신청 대학 대상 실시 • 일반재정지원대학만 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 정량지표로 별도 지정)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선 방향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및 교육의 질 향상 유도

-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을 비중 강화
- 대학 특성화(학사구조·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등)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유도
-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 확대 등 지역대학 지원 강화

▪ 진단 기능 단순화 및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진단 결과 활용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 국한하고, 대학에 진단 참여 선택권을 부여

▪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 1·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개편하고, 지표 체계를 간소화
- 진단·인증 간 유사 지표(요소) 연계 및 공동 활용

▪ 학생의 강좌 선택권 보장 및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지표* 포함

* 총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 등

○ 주요 정량지표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재정 건전성 등 주요 정량 지표에 대한 일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준 충족 시 제한을 해제하여 대학의 자구 노력 유도

○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부담 완화 추진

- 대학 대상 평가별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지표·방식 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평가 부담 완화 방안 마련('20~)

✓ (과제 목표) 고등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 ☞ (장애 요인) 양적 성장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 운영으로 대학 설립유형별
 - 기능별 차별성 부족
 - 학령기 위주의 대학 학사구조 및 학사운영으로 신수요 대응에 한계
 - 학생인구 급감 등으로 위기·폐교대학 증가가 예상되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및 대학의 자발적 퇴로 관련 제도적 장치 미흡
- ☞ (추진 전략)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사립대학의 역할 다변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 고등교육기관 기능 정립 등 설립유형별 특성화 추진
 - 성인친화적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해외 진출, 우수 유학생 유치·관리를 통한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
 - 폐교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폐교 대학 관리 방안 마련, 위기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 검토

1 설립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 육성 지원

□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 고등교육 기회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국립대 고유 역할과 기능 및 국가의 지원 의무를 관련 법률에 규정 추진('20)
-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충
 - ※ 전남대, 기초보호학문 중심으로 총 45건의 새로운 융·복합 교육과정 (지역어문학과 문화융합, 삶속의 생명과학 등) 개발·운영('18.)
 -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대학원 단계 강점 분야 연구 역량 강화
 - ※ 국립대학 육성사업 : ('19) 1,504억원

-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 실험실 안전투자 확대 등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지원 확충
- 미래 신산업 및 지역산업 분야 복수(부)전공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첨단화 등 인프라 확충

□ 책무성·특성화 기반의 “공영형 사립(전문)대” 도입 추진

-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공적역할 강화 및 운영 책무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건전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전문)대’로 선정·지원 검토
- 역할에 따른 사업모델 (지역형, 직업형 등) 유형화 및 사업 지원 요건 등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19.8~)

※ '19. 공영형 사립대 도입 필요성 관련 정책연구 진행 중

< 공영형 사립대 기본 요건(예시) >

- 이사 정수 1/3~1/2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개방이사 포함)
- 설립자·임원 친인척의 개방이사 선임 제한, 이사장 친족 총장 임명 제한
- 국립대 재정위원회에 준하는 재정·회계투명성 장치 필수 마련
- 비리 임원 선임 제한 강화 및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매년도 감리 실시
- 의사결정구조에 지자체·시민사회 인사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편

□ 평생·직업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혁신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직종과 연관된 현장성 높은 실무교육 및 교수·학습방법 지원 강화
-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학습자* 친화형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과정 집중 운영

*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경력단절자 등) 포함

-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정립을 위해 「(가칭) 전문대학 혁신방안」 수립 추진 ('19.하)

※ 「(가칭)전문대학 혁신방안」 추진 방향(안)

구 분	개 선 방 향 (안)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관련 규제 완화 추진 ▪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학의 다양한 고등직업교육기관 체제 개편 모델 발굴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 강화로 직업교육 트랙 조성
부처 및 지역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직업교육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대-폴리텍대 간 연계·협력 강화로 운영 효율화 추진

-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직업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를 위해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검토

2 새로운 교육수요 발굴 및 관리

□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 학문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중심의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도록 지원
-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확대) 성인학습 수요에 대응하는 지식·이론, 현장 중심, 직무역량 중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 대학 자율로 성인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및 다양한 수업방식 등을 운영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을 통한 성인친화적 운영 모델 확대
-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 확대) 성인학습자 전형 등 수능 점수가 아닌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 확대

※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 확대(정원 내·외)

- 비수도권 전문대학(만 25세 이상)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만 30세 이상)으로 확대, 향후 충원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수준 조정

□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해외 진출 활성화

-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서 운영하고, 과정 이수 학생에게 국내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 진출 활성화」
- 다양한 분야의 교원 확보, 참여 학생 확대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규제개선 주요내용('20년 이후부터 적용 가능)

구분	현행	개선
교원 자격	▶(정보공시기준) 전임교원	▶(정보공시기준) 전임교원 + <u>강사</u>
학생 자격	▶내국인 참여 불가(학부)	▶내국인 참여 제한적 허용(학부)

※ 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19.하) → 기준 개정 및 시행('20~)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한국유학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입학지원 서비스를 통한 한국유학 접근성 제고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 ('14) 8.5만 명 → ('23) 20만 명

-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3주기('20~'23)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체계(IEQAS*) 개편 추진('19)

*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주요 개편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언어능력 인증기준	통합 평가 30%	분리 평가 40%
비자발급 제한기간	1년	2년

3 폐교대학 후속 지원 및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

□ 해산법인 청산 및 폐교대학 관리 지원

- 해산법인의 원활한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 후속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법률 개정 추진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해산법인의 청산인 및 폐교대학의 기록물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18.8~)

•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청산인이 될 경우 청산인의 전문성 부족, 폐교 재산의 낮은 활용가능성 등의 문제로 매각이 어려워 청산 지연
⇒ 기존 해산된 법인(8개)중 청산 종결된 법인은 1곳에 불과

- 폐교대학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폐교 교직원의 임금 체불 정리 및 기록물 보존 등 종합 지원방안 검토

《 폐교대학 종합 지원방안(안) 》

- 폐교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체당금 및 실업급여 등의 수혜 불가
⇒ 폐교 교직원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방안 검토
- 폐교 및 해산 법인의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청산의 장기화, 학생 및 교직원에게 관한 폐교 기록물 보존·관리의 어려움
⇒ 후속관리를 전담하는 전담기구 설치·운영 필요

□ 폐교 재산의 활용 및 매각 촉진

- 폐교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기준 마련

- 일반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허가*와 달리 폐교 대학의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 가능하도록 별도의 처분 허가 기준 마련

* 일반적으로 관할청은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 이상”으로 재산처분 허가

- 「국고로 귀속되는 폐교대학 잔여재산 활용」 방안 모색
 -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이를 폐교 및 해산법인 지원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 해산법인 8개 중 7개 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고 귀속 예정임
- * 법령 개정 필요사항

- (사립학교법) 국고로 귀속된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금(사학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학진흥기금의 용도에 “폐교 및 해산한 학교 법인에 대한 지원·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 추가

□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

-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자진 폐교 및 해산 등을 위한 방안 검토

《정책 방안 검토》

- * 사립대학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에 한하여 귀속주체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자발적 퇴로(자진폐지) 유도 방안 검토
 - 과거('97~'06)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한시 적용되었던 사립학교법 특례(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대학”에도 한시적으로 적용 검토
-

구 분	주 요 추 진 일 정
1. 융합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학과 설치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 '19.하 -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 '19.하 - 대학 자율로 융합학과설치 등을 위한 학칙 개정 : '20 •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 '19.하 - 컨설팅 모델 수립 : '20 - 맞춤형 학사제도 컨설팅 추진 : '20.~ • 학부교육 혁신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우수사례 발굴) : '19.하 - '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20
2. BK21 후속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시안 마련 및 의견수렴 : '19.하 - 기본계획 확정 • 발표 : '19.하 - 사업 선정 공고 및 선정평가 : '20.상 - 사업 시행 : '20.중
3. 지역 혁신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20년 사업예산 확보 : '19.하 - 사업 기본계획 확정 • 공고 (균형위 • 정부TF) : '20.상 - 지역 컨소시엄 구성 및 계획 수립 • 제출 • 신청 : '20.상 - 선정평가 및 계획 컨설팅, 지자체-대학 사업추진 : '20.하
4. 대학 기본 역량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 '19.8.14.(수) -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방안 확정 : '19.하 - '21년 진단 권역별 설명회 : '19.하 - '21년 진단 준비 : '20 - '21년 진단 실행 및 결과발표 : '21.
5. 폐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 추진 : '19.하 ~ (계속) - 폐교대학종합관리사업 예산 확보 추진 : '19.하 - 폐교대학종합관리사업 추진 : '20
6. 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정책연구 : '19.하 - 규제발굴 및 규제개선 추진 : '19.하 (지속) - 대학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수립 : '20.상 - 규제혁신 방안 추진 (관련법령 제 • 개정 등) : '20.하
7. 사학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19.8월 -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19.하~ (계속) - 법인 임직원 대상 연수 및 세미나 개최 : '20

□ 입법과제 현황 (과제별)

정책 과제명	개정 필요 법령명	추진 상황		
		추진중	'19.下	'20
[과제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 혁신」				
1. 융합학과 설치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	
2. 산업맞춤 단기직무 능력인증과정 매치업 운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제2]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혁신」				
3. 상시 산학협력력 체계 구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9.4. 의원발의)		
4. 대학원의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 구축(공시항목 확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5. 학술정책지원 전담기구 설치	학술진흥법 등			○
[과제5] 대학별 특성화 지향 「체제 혁신」				
6. 국립대학 공적 역할 강화	고등교육법(제3조의2 신설)			○
7. 평생·직업 고등교육 기관 으로서의 “전문대학” 혁신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검토 추진			○
8.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 확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
9. 국내대학의 교육 과정 해외 진출 활성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지침)			○
10. 해산법인 청산 및 폐교관리 지원	사립학교법 시행령	○ (‘18.8. 의원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과제6] 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11. 총 정원 범위 내 입학 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
12. 이동수업 운영 기준 개정 추진	이동수업 운영 기준(지침)			○
13.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 학교장 위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	
14.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 행위 관할청 보고사항으로 변경	사립학교법 시행령		○	
15. 법인과 학교의 예산 확정 기한 일원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16. 동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대학설립운영 규정			○
17. 비전임교원 임용보고 서식 간소화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고시)		○	
[과제7] 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학 혁신 등」				
18. 법인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사립학교법	○ (‘19.6. 의원발의)		

□ 입법과제 현황 (법령별)

법령명	정책 과제명	추진 현황 및 계획
고등교육법	■ 국립대학 공적 역할 강화	■ 제3조의2(국립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원) 신설 추진('20)
고등교육법 시행령	■ 총 정원 범위 내 입학 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신설 추진('19.하~)
	■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개정('19.하~)
사립학교법	■ 법인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 교육위 계류 중('19.6.)
사립학교법 시행령	■ 해산법인 청산 및 폐교관리 지원	■ 교육위 계류 중('18.8.)
	■ 학교법인의 금전 차입 행위 관할청 보고사항으로 변경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9.하)
학술진흥법	■ 학술정책지원 전담기구 설치	■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해산법인 청산 및 폐교관리 지원	■ 교육위 계류 중('18.8.)
(가칭)직업교육진흥법	■ 평생·직업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혁신	■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관련 검토 추진('20.~)
대학설립·운영 규정	■ 총 정원 범위 내 입학 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교원 등 확보요건 예외 인정 관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8항 신설 추진('19.하~)
	■ 동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맞춤 단기직무 능력인증과정 매치업 운영	■ 입법예고('19.중) → 규제·법제 심사('19.하) → 개정완료('19.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학원의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 구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 학교장 위임	■ 입법예고('19.중) → 규제·법제심사('19.하) → 공포('20.초)
	■ 법인과 학교의 예산 확정 기한 일원화	
사립학교 교원 임용 보고 서식(고시)	■ 비전임교원 임용보고 서식 간소화	■ 의견수렴 및 고시('19.하~)
외국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지침)	■ 국내대학의 교육 과정 해외 진출 활성화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 관련 의견 수렴('19.하~)
이동수업 운영 기준(지침)	■ 이동수업 운영 기준 개정 추진	■ 이동수업 운영 기준 개정 추진('20.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상시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	■ 국토위 계류 중('19.4.)

붙임 3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흐름

	'61~'79	'80~'87	'88~'92	'93~'97	'98~'02	'03~'07	'08~'12	'13~'17	'17~
법	사립학교법 제정('63~) 학술진흥법 제정('79)				고등교육법 제정('98)		서울대법 제정('11) 한국연구재단법 제정('09)	국립대학회계법 제정('15) 인천대법 제정('13)	사립학교법 개정('19.1. 바른대학재산 구속 제한 고등교육법 개정('19.1. 강사법)
재정				국책공대 중점지원 (94~'98)	BK21 (99~'12) 국립대 구조조정 평가사업 (00)	NURI (04~'08)	교육역량 강화사업 (08~'13) WCU (08~'12) ACE (14~'16) LINC (12~'16)	PRIME (16~'18), OK('14~'18), SCK (14~'18) CORE (16~'18), WE-UP (16~'19), ACE플러스 (17~'18), POINT (14~'17), BK21플러스 (13~'20), BRIDGE (15~'17), 지역선도 대학육성 사업('14~'18)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19~'21), 국립대학 육성사업 (18~'22), LINC플러스 (17~'21), BRIDGE 플러스 (18~'22) 지역선도 대학육성 사업('19~'23)
평가						대학구조 개혁('05)	대학재정 지원제한 대학선정 (10~'14)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선정 (10~'14)	경영부실 대학선정 (13~'14) 1주기 대학구조 개혁평가 (15)	대학기본 역량진단 (18)
정원 학사		졸업정원제 (81~'87)	입학정원제 (88~)	대학설립 준칙주의 (96)	학생정원 자율화 (01~)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02)	계약학과 설치('03)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도입 (08)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도입 등 대학학사 자율화('17)
학비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89)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12~)		대학 입학금 폐지('18)
학술 연구	학술연구 조성비제도 도입('64)	학술진흥 재단 설립('81)			기초학문육성 기본계획('01) → 2천억대 증액('02)	인문학진흥 계획수립, HK('07)	학진, 한국 연구재단으로 통합('09)	인문학진흥 5개년 계획('17)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19)

- 국립대 설립으로 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기초학문 및 국책사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였으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사립대 급증
- 정원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 정원은 지속 증가하였으나 '03년부터 학생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증원 요건 강화*
 - * ('99년) 교원·교사 50% 충족 → ('03년) 교원·교사 80%, 교지·수익용기본재산 55% 충족 → ('07년 이후)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100% 충족
- '0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국·사립대별 정원감축과 대학·학과 간 통폐합 추진
- 5.31 교육개혁안에서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를 제안한 이래 정부 주도 대학평가에 의해 대학·사업 간 수월성을 위한 차등 재정 지원

붙임 4

우리 대학의 미래모습

구분		과거	미래
교육과 연구		 신산업 인력 해외유치	인력수요 신산업 융합인재 양성 
		 단일 전공	학사 융합 전공 
		 개별 단과대학	학과 하나의 통합·연계대학 
		 교수 중심 강의 수업	수업방식 개별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 수업 
		 졸업 논문 필수 강의를 통한 학점 이수	교육과정 프로젝트 수행 결과로 졸업 수업, 연구, 실습 등으로 학점 이수 
		 개인 연구자 단일 연구	연구 대학 본부 중심 융복합 연구 
지역		 개별 기관별 독립 운영	기관간 관계 지역 내 통합적 협업 운영 
		 고졸 진학자 중심 기초·심화 학문위주교육	교육 대상 등 지역 주민 전 생애 교육 지역 산업 직업 기술 교육 지역인재 기초·심화학문 교육 
기반	혁신기반	 정부주도 정원 감축	평가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비슷한 여러 대학	체제 특성화 (미래형, 교육형, 직업형 등) 
		 획일적 통제	규제 자율성 존중 
	신뢰기반	 회계부정, 학사비리 등 교육현장 신뢰도 저하	신뢰 연구윤리 확립, 법인·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